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윤철기(서울교육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북한사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이며, ‘계급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는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계급체제’가 실재한다. 시장화의 확산과 계급경제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변화는 주로 위계구조의 ‘아래’에서 발생한다. 첫째, ‘돈주’라고 일컬어지는 시장화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 계층이 형성되었다. 둘째,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사적 분야에서 고용되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체감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계급은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적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북한 시장화, 노동계급, 정치적 계급체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571).

1. 문제제기

북한사회의 변화는 경제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획경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으며, 배급은 중단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두 손 놓고 더 이상 정부만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었다. 북한의 시장화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북한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시장화의 확산을 묵인하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시장을 단속했다. 정부의 지그재그 패턴의 불규칙한 노선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고, 소비재 유통시장에서 시작하여 전기(前期)적 자본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의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소비는 그렇지 않았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산이다. 그런데 유통부문에서 자율성 확대는 생산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계획경제의 생산부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계층들은 관료와 정부당국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일부 공장과 기업소들을 직접 운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 가운데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또 일부는 사적으로 고용된다.

마르크스(Marx)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에서 사회주의는 가치법칙

이 작동하지 않고 계급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이다. 그리고 계급의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로 이어진다. 북한체제는 스스로를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계급 없는 사회’로 규정해왔다. 『주체의 계급리론』은 북한 사회에서 계급을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세 계급으로만 분류한다.¹⁾ 북한사회에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존 사회주의에서 지배계급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이 실재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지배계급의 존재 여부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성격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토대로 이익의 사유화와 세습 등의 문제에 기초하여 계급을 정의하는 논의들은 현존 사회주의에서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존 사회주의의 관료들이 사회경제 영역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²⁾ 반면에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급관계는 ‘당의 지배’라는 형태로 표출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³⁾ 이러한 입장에서 당과 국가의 관료는 단지 권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경제 영역을 구조적으로 지배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에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사회주의와는 달리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계급체계’가 실재한다고 판단한다. 정치권력과 중하위 관료

1) 김천식, 『주체의 계급리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2) Alec Nove, “The class nature of the Soviet Union Revisited,”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London: Allen and Unwin, 1986), p. 225; David Lane, *Soviet Labour and the Ethic of Communism*(Colorado: Westview Press, 1987), pp. 159~160; Werner Hofmann, *Stalinismus und Antikommunismus: Zur Soziologie des Ost-West-Konflikts*(Frankfurt: Suhrkamp, 1969), pp. 13~20.

3)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Rudolf Bahro,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Manchester: New Left Review Press, 1978); Peter Schultze, “Übergangsgesellschaft und Außenpolitik.”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Milnovan Dijlas, *The New Class*(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85).

는 계획경제 체제를 이용하여 잉여를 수취하고 배분하며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근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이러한 정치적 계급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계급경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급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돈주’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계급체계에는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돈주는 시장화를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와크(수출입 허가권)’를 사서 무역과 해외 수입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소와 공장을 위탁경영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대부해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주가 위탁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돈주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그들이 사는 집에 사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에도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 이후 북한의 계급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에서 계급문제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에서 개인적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전체 사회적 노동시간 가운데 자신의 제공한 노동 시간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물론 결과적

으로 이는 평등하지 못하다. 하지만 적어도 생산자로서 노동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모두 평등하다.⁴⁾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사회화가 실현된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잉여생산물의 수취가 사라지고, 대신에 개인의 발전과 모두의 발전이 대립되지 않는 연합체가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수취방식과 기존의 모든 수취방식을 모두 폐지해야만 사회적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⁵⁾ ... (중략) ... “발전과정에서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은 연합한 개인들의 수중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공적권력(*öffentliche Gewalt*)은 그 정치적 성격을 잃는다. 정치권력은 본래의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한 계급의 권력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통일되고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되며, 지배계급으로서 과거의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gewaltsam*) 폐지시킨다면, 그 결과 이러한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대립의 존재조건, 주로 계급의 존재조건, 그리고 이에 따라 계급으로서 자신의 지배까지 폐지시킨다. 계급과 계급대립이 존재하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⁶⁾

4) Karl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arx Engels Gesamtausgabe* 25. Berlin: Dietz Verlag([1875]1985), pp. 13~14.

5) Karl Marx·Friedrich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arx Engels Werke* 4(Berlin: Dietz Verlag, 1977), p. 472.

6) *ibid.*, p. 482.

엔겔스 또한 사회주의에서 생산력은 ‘연합된 생산자들의 손(*Händer assoziierter Produzenten*)’에 있게 되고[“반뒤링론(Anti-Düring),” MEW 20, p. 261], 생산은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동등한 연합’(『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MEW 21, p. 166)에 기초하여 조직된다고 주장했다.⁷⁾

개인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잉여생산물은 노동자 연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수취된다. 노동자 연합은 공동체의 생산수단으로 노동하고 또 수많은 개인들의 노동력이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지출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을 말한다.⁸⁾ 또한 잉여생산물의 분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국가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지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급관계가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혁명의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으로 상승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로부터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에 집중시키면서, 가능한 급속하게 생산력의 규모를 증대시킨다.”⁹⁾로 적고 있다. 또한 엔겔스는 『반뒤링론』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우선 생

7) Herbert Marcuse, *Soviet Marxism: Critical Analysis*,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문헌명 옮김(서울: 동녘, 2000), 37쪽.

8) Karl Marx·Friedliche Engels, “Manifest der Kommunitischen Partei,” *Marx Engels Werke* 4, p. 482.

9) *ibid.*, p. 481.

산수단을 국유화한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로서 스스로를 폐지시키고, 따라서 계급적 차별과 계급적 차이를 폐지시킨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국가도 폐지시킨다.”¹⁰⁾

국가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¹¹⁾ 사실 마르크스주의에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국가의 소멸은 당연한 귀결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이므로,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의 소멸은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 엥겔스의 『반뒤링론』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사회계급의 폐지(*Abschaffung*)는 단지 이러저러한 특정 지배계급의 존재가 아니라 주로 하나의 지배계급의 존재를, 또한 계급차별의 존재를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는 사회적 발전 수준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것(역자: 사회계급의 폐지)은 어떠한 하나의 지배계급에 의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수취와 그에 따르는 교육과 정신적 지도의 독점을 통한 정치적 지배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지적으로 발전에 방해가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생산 발전을 전제로 한다.”¹²⁾

10) Friedrich Engels, “Anti-Dühring,” *Marx Engels Werke* 20, p. 361.

11) Friedrich Engels, “Anti-Dühring,” *Marx Engels Werke* 20, p. 263.

12) *ibid.*, p. 263.

3. 북한의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

1) 정치적 계급체제의 변화

북한체제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의 개념과는 달리 계급이 실재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급은 당과 대중 간의 권력관계로 표출된다.¹³⁾ 현존 사회주의의 계급관계는 당을 중심으로 편제된 위계적인 권력구조에서 개별 지위에 따라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결정되는 ‘정치적 계급체제’이다.¹⁴⁾ 정치적 계급체제는 계획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그림 1> 참조). 정치관료는 잉여생산물과 노동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분배를 통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과 경제적 조정양식(계획과 시장)까지 통제하고 관리한다.¹⁵⁾ 정치관료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잉여의 수취와 배분의 권한을 가진다. 관료의 위계구조는 스스로를 ‘지식의 위계(Hierarchie des Wissens)’로 파악하고, ‘위’는 보편적인 통찰력을 가지며 ‘아래’가 위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⁶⁾ 그러나 실제로 지식의 위계에서 상층에 위치한 계획자에 의해서 계산된 사회적 필요는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경제잉여를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사용한다.¹⁷⁾ 다음 중하위관료는 계획을 집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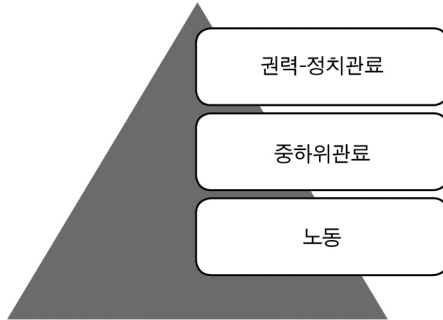
13)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 p. 44; Peter Schultze, “Übergangsgesellschaft und Außenpolitik.”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pp. 161~162; Rudolf Bahro, *Die Alternative*(Köl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77). pp. 198~199.

14)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 pp. 327~337.

15)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42쪽.

16) Rudolf Bahro, *Die Alternative*, pp. 180~181.

<그림 1> 정치적 계급체계



자료: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43쪽.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잉여생산물의 배분과 사용의 권한을 가진다.¹⁸⁾ 이는 관료의 렌트추구(rent-seeking)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은 경제잉여를 생산하지만, 잉여의 배분과 사용에 대한 결정에서 배제된다.²⁰⁾

17) Phillip Bryson, *The Reluctant Retreat*, p. 222.

18)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42쪽.

19)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개념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János Kornai,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9. Fasc. 1(1986); 다만 연성예산 제약은 다소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학계의 동의가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다. 연성(softness)은 경성(hardness)의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연성과 경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예산제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연성이며,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성 예산 제약 개념을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의 편성과 실행과정에서 협상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자 한다. 연성예산제약 개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Kornai, Maskin, and Roland,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1. no. 4(2003), pp. 1095~1136.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정치사회적 자율성은 극히 제약되었다. 당이 노동계급의 ‘초자아(super-ego)’가 되어 노동계급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었다.²¹⁾ 권력은 ‘왜곡된 마르크스주의(distorted marxism)’를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했고, 노동계급의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²²⁾ 노동계급은 정치와 혁명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 계획의 편성과 실행에서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는 쉽게 반영되지 못했다. 북한체제의 경우에는 1953년 전후 복구과정이 시작된 이래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당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하향식(top-down)으로 관철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노동계급은 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경제잉여의 수취와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²³⁾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이후 배급제는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잉여의 생산과 배분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결과 권력은 계획과 명령을 통해 국내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권력은 노동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자원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원조나 자원수출과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벌여

20)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42쪽.

21) Daniel Kubat, “Soviet theory of classes,” *Social Forces*, Vol. 40, No. 1, p. 6.

22) Bahro, *Die Alternative*, p. 197.

23) 북한 계획경제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노동의 동원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윤철기,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2015), 90~110쪽.

들이 외화 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권력자원이 되었다.²⁴⁾ 외부로부터 유입된 권력자원은 다소 이완한 형태이지만 정치적 계급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배급제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노동동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천리마 운동,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있었고, 최근에는 4차 핵실험 이후의 70일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계급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화의 확산과 계급경제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변화의 경향은 주로 위계구조의 ‘아래’에서 발생한다. 첫째, 시장화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 계층인 ‘돈주’이다. 하지만 돈주가 완벽하게 정치적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돈주는 관료들의 후견을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돈주는 권력기관이나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대가로 소득(렌트)의 일부를 상납하게 된다. 이 소득은 권력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관료의 사적 이익의 형태로 수취된다. 즉, 돈주의

24) 외연적 렌트는 그 발생기원이 국민경제 외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렌트의 외생성(externality)은 렌트수취경제(rentier-econom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렌트수취경제는 국내시장이 취약하지만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저발전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천연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초과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연적 렌트’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후 자연자원 외에 원조나 무역으로 발생하게 되는 국제적인 소득이전(transfer), 즉 초과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면서 ‘국제 렌트(international rent)’로 명명되기도 한다. Hazem Beblawi,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The Rentier State*(New York: Croom Helm, 1987), p. 51; Claudia Schmid, *Das Konzept des Rentiers-Staates*(Hamburg: Lit Verlag, 1991), p. 17;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서울: 양림, 2005), 290~297쪽.

존재와 그들이 공여하는 렌트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치적 계급체계가 유지되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노동계급과 농민들 가운데에 계급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장마당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국경을 넘나들며 공식·비공식 무역을 한다. 또 돈주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부를 축적한 가정에 사적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계획경제 시스템에는 벗어났지만 기존의 계급체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관료와 노동자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계획이라는 일상적인 통제장치에서 벗어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료들이 돈주들을 정치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으로 돈주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정치적 계급체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계급체계가 이완된 상태에서 관료-돈주 간의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은 새롭게 잉여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형성된 것과 같다. 계획을 매개로 하는 제도화된 계급체계가 불안정해지자 인적 관계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계급관계는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근간으로 한다. 전(前)자본주의 사회와 현존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의 근간은 권력의 불평등을 기반으로 생성되었다. 권력은 혁명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강제력(force)을 바탕으로 지배를 성취하지만, 이후 힘에 의한 지배는 법과 제도를 통한 지배로 전환된다. 권력은 제도화된 권력, 즉 권위(authority)를 가지게 된다. 권위는 타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right)이다.

그 권한은 지위(position)로부터 나온다.²⁵⁾ 반면 자본주의에서 계급은 자원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된다. 재산(property)을 가진 자는 노동계급을 고용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본가는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를 전유하고 분배·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계급관계는 언제나 정당성의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위기는 권력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채,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비특권계급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계급의식은 처음에는 감정적인 것이다. 특권계급의 착취와 명령에 대한 비특권계급의 불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급적 불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비특권계급은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이익과 특권계급의 이익을 비교한다. 비특권계급은 자신의 이익이 언제나 특권계급의 이익보다 작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비특권계급의 이러한 계산은 특권계급에 대한 적대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계급적 적대성은 모순이 심화될수록 특권계급에 대한 갈등과 대립 혹은 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된다. 계급적 적대성은 이성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것이다.

물론 적대적 계급관계가 언제나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대 민주주의는 계급관계의 적대성을 약화시키거나 무마시킬 뿐만 아니라 계급적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제를 발전시켜왔다. 서구의 정당정치는 계급균열을 근간으로 한 것이며,²⁶⁾ 정당들은 서로 다른 계급적 이해관계를 공식적인 공론장(Öffentlichkeit)인 의회라는 공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²⁷⁾ 하지만 특권계급은

25)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26)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New York: Free Press, 1967).

정당성이 없는 렌트추구(rent-seeking) 행위 — 시장의 독과점이나 로비, 뇌물공여와 같은 부패 — 마저도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한 특권계급의 행위에 대해서 비특권계급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급적 적대성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리고 즉 계급적 적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계급관계는 이성이나 감정,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마음체계’를 가진다. 마음체계는 이성과 감정의 변증법적인 통일체이다. 본 연구가 체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계급관계에 따른 마음의 변화에 어떠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또 마음체계가 변증법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계급관계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결코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계급적 적대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마음체계 내에서 감정이 지배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통념적인 인식은 정확성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비특권계급의 분노와 저항은 특권계급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근간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 안에 존재하는 이성과 감정 간의 관계는 변증법적이다.

27)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시기 영국에서 공론장의 형성은 신분제 의회가 근대적 의회로 변화되는 과정으로서 한 세기 전체에 걸쳐 진행된다. 영국에서 공중의 참여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은 한편으로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제한적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 매뉴팩처 자본과 산업자본의 팽창하는 이익 간의 대립이 증첩되게 되면서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약한 당파가 정치적 대결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이다. 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옮김(파주: 나남, 2009), 135~136쪽. 이처럼 근대 의회가 정치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계급적 분파의 그들의 이익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대변한다. 자본가는 전통적인 특권계급과 달리 신분질서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특권계급은 최소한 걸음으로는 금욕적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특권계급인 자본가의 이윤추구(profit-seeking)는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장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어떠한 물질적 욕망을 표출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특권계급이 형성된 것이다. 노동계급은 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급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급이다. 자본과 노동은 혁명 과정에서 참여해서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종식시켰다. 혁명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은 연대했다. 혁명 이후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는 부침을 거듭한다. 때로는 대립하게 되고 때로는 타협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은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익관계를 제로섬 게임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임금노동과 자본(*Wage labor and Capital*)』이란 팸플릿 8장 첫 문장에 “자본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은 정반대로 서로 대립한다”고 적고 있다.²⁸⁾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타협과 연대를 일종의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으로 취급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언제나 대립적이지는 않다. 이는 노동계급의 허위의식 때문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되는 한 두 계급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과 노동의 이익이 언제나 배치되지 않는다. 특히 케인

28) Karl Marx, *Wage Labour and Capital*. in Marx/Engels Internet Archive([1847]1999).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Marx_Wage_Labour_and_Capital.pdf).

즈주의의 등장 이후 완전고용과 평등한 소득분배는 결국 자본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1945년부터 1970년대 복지국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익은 결코 배치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대자적 계급(class for itself; Klasse für sich)’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The Poverty of Philosophy*)』(1955)에서 대자적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경제적 조건은 처음에 국가의 대다수를 노동자로 전환시킨다. 자본의 결합은 이러한 대중에 대하여 공통의 상황, 공통의 이익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은 이미 자본에 반대하는 계급이지만, 아직 대자적(for itself)이지 않다. 우리가 단지 몇몇 국면에서 주목했던 투쟁에서, 이러한 대중은 통합되고 스스로를 대자적인 계급으로 구성한다. 계급이 방어하려는 이익이 계급이익이 된다. 그러나 계급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²⁹⁾

정치적 계급투쟁은 경제투쟁이 심화되었을 때 노동계급이 계급적 존립근거의 취약성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이 정치투쟁은 결코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에게 가지게 되는 ‘적대성’에는 노동계급을 상대로 이루어진 착취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포

29) Karl Marx, [1955]1999. *The Poverty of Philosoph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99. Marx/Engels Internet Archive html ed. 2009.01.10 검색.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7/poverty-philosophy/ch02e.htm>.

함한다. 그리고 대자적인 계급이 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꿈꾸게 된다. 즉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정치투쟁에 임하는 노동자의 마음은 혁명적이다.

레닌(Lenin) 역시 정치투쟁을 강조한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란 팸플릿에서 경제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치의식을 강조한다.³⁰⁾ 그런데 그는 계급의 정치의식은 경제투쟁의 외부에서만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치지식을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자는 모든 계급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의 이와 같은 사고는 이른바 ‘혁명적 전위(vanguard)’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전위가 없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자적인 계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레닌의 이러한 인식은 전위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후 현존 사회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투영되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혁명의 주체도 정치의 주체도 아니었다. 단지 노동계급의 지배권력이 된 전위의 명령에 따르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지배권력은 노동계급에게 더 이상 적대성을 가질 필요도, 그렇다고 정치투쟁을 통해서 대자적인 계급이 될 필요도 없음을 강조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의 마음은 단지 당과 국가의 명령을 담은 그릇에 불과했다. 현존 사회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강요했던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는 온전히 노동계급의 것이 아니었다. 즉, 현존 사회주의적 노동계급에게 요구되었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요구되었던 적대적 계급의식과 계급투쟁에 대한 의지를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명령의 수행으로 전환하는

30)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김민호 옮김(서울: 백두, 1988), 89~90쪽.

것이였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변되는 개혁과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체성 위기가 시작된다. 특히 노동계급이 당과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연대노조 운동은 대표적인 예이다. 권력의 명령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았던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발달한 동유럽 국가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노동계급의 적대성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위기와 적대적 계급의식의 형성은 동유럽 체제전환의 결정적인 국면이 발생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체제전환 이후 노동계급은 비로소 다시 이중의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노동’이 된다.

북한 노동계급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 위기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생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집단의 형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이 형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주민들을 노동자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까지 규정할 근거는 아직 미비하다.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비출근집단이나 주민들의 탈북 역시 당과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일 뿐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당과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계급의식이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도 돈주들

처럼 부를 축적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했다. 즉, 현재 북한의 노동 계급의 마음체계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은 약화되었지만 대신 적어도 현재까지의 계급의식 수준은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성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장화 이후 정치적 계급체계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변화

북한경제의 시장화(Marketization)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에는 약 4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이러한 수치는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화는 처음에는 소비재 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생산재 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양문수, 2010). 북한정부는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를 통해서 시장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듯이 보였지만, 2005년 말 다시 보수노선으로 회귀했다. 2009년 11월에는 다섯 번째 화폐 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복원되기 어려웠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만

31)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2015년 5월 20일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장마당 396”라는 제목의 기사를 타전한 바 있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704c131c0acc9c4-d558b298c5d0c11c-bcf8-bd81d55c/satelite-05202015154923.html(검색일: 2015년 5월 24일).

확산시켰을 뿐이다.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계획과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국가의 단속과 처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경제는 한편으로는 계획과 명령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단속하고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

계획과 명령의 실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비출근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비출근집단의 증가는 북한의 정치적 계급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계급체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권력 상층부의 명령이 아래로 관철되면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동계급에 대한 동원과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출근집단의 발생은 명령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동원과 착취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권력은 이를 대신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돈주와의 결탁을 통해서 ‘장마당’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노동의 잉여를 착취하는 방식이다. 돈주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하여 저임금의 노동력이 생산한 잉여(rent)를 수취한다. 그리고 권력은 돈주가 수취한 렌트를 워크의 전매나 뇌물을 공여받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전유한다. 권력은 돈주라는 새로운 상인계층을 이용하여 명령 대신에 시장과 가격을 이용해서 정치적 계급체계를 유지한다.

비출근집단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자들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공장에 납부하고 실제로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다. 8.3 노동자의 어원은 ‘8.3 인민소비품 운동’이다. ‘8.3 인민소비품 운동’은 지방공업 등에서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 원자재로 생산물을 소비재로 만들어 쓰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말이 변질되어 8.3

노동자는 자신이 배치받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장마당에서 시장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3 노동자는 ‘분조’나 ‘작업반’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시장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³²⁾ 8.3 노동자는 공장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이다. 둘째, 무직자이다. 북한사회에서는 ‘부양’으로 분류되는 주부,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장과 기업소의 허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에서 무직자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무직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대부분 ‘노동 단련대’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유민들이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속한 공장에 출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주거지를 벗어나 불특정한 장소를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지역의 빈집 등에서 살아가며 주변의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넷째, 사적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사적 노동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은 개인 집에 고용되어 다양한 집안일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가사노동이나 물배달을 하거나 미장 및 집수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³³⁾ 탈북자 B씨(함경북도 28세)는 집에서 ‘머슴’으로 두 명 정도를 고용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삿바리’라 한다고 했다.

32) 탈북자 C씨(신의주, 32세)는 5~6명 단위의 ‘8.3 분조’로 일을 하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공장에는 월 300달러를 납입하고, 자신들은 장사를 했다고 한다.

33)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2009), 149~171쪽.

그리고 집에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도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 유형에는 모내기나 추수철 등 노동동원 시기에, 일부 주민들이 ‘사람을 사서’자기 대신 동원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³⁴⁾ 두 번째 구체적 유형에는 신흥 부유계층인 소위 ‘돈주’들이 국가로부터 워크수출입 허가권을 사들여 만든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이다. 사적분야에 고용된 노동은 부분적으로 합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다. 마지막 유형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짐꾼’을 쓰게 된다. 이때 장사하는 이들은 가까운 거리는 ‘리어카’를, 먼 거리는 ‘씨비차’를 이용하고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들은 거리, 무게, 시간 등을 고려해서 돈을 지불받는다. 이들 가운데 짐꾼들은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리어카’와 ‘씨비차’는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즉 리어카, 차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배권력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노동관리 만큼은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배치받는다. 직장에 배치받은 노동자들은 공장과 기업소가 속한 지방정부에 있는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어느 공장에 배치받았다는 증명서, 즉 ‘배치장’을 받는다. 노동자는 이 배치장을 공장의 노동과에 제출하면, 공장의 노동과는 노동자에게 ‘확인서’를 준다. 그러면 노동자는 공장에서 받은 확인서를 지방정부의 노동과에 제출한다.

34) 탈북자 B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는 동원을 대신 나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5,000원(북한 원화) 정도가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절차는 끝이 난다. 이렇게 수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정지 증명서’이다. 식량정지 증명서에는 그동안 그 노동자가 어디를 거쳐 이 공장에까지 배치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다. 식량정지 증명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력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탈북자 B: 함경북도(28세)]. 그런데 ‘돈주’들이 와크를 구매해서 설립한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탈북자 B: 함경북도(28세)]. 돈주들이 세운 회사에서 나온 이익은 권력기관에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거나 관료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남은 이윤은 기본적으로 모두 돈주의 몫이다. 그렇지만 고용절차만큼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 운영되는 공장이나 돈주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돈주의 자율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 돈주의 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돈주의 개인적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고용절차는 계획경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로동과’에 신고를 하고 배치서를 받아서, 회사의 고용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노동과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마찬가지로 ‘식량정지 증명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즉 채용의 결정은 일정정도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기본적인 노동관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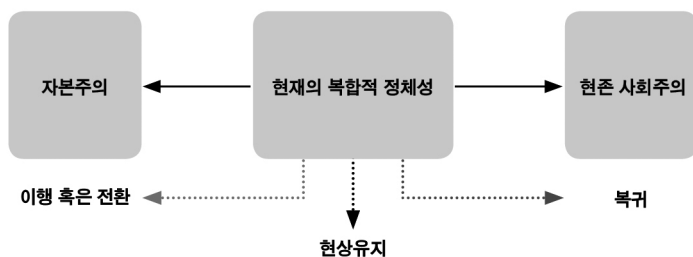
물론 시장화 이후 국가의 노동관리는 전과 같지 못하다. 사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엄청히 존재한다. 탈북자에 따르면, 사적 분야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과 기업소에 출근해도 생활비와 배급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개인집에서 다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일이라도 맡으려고 하지만, 이 역시 하려는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³⁵⁾ ‘머슴’이라 불리는 이들은 단속되면 역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공여하면 눈을 감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탈북자 A: 함북 회령/2014년 탈북/장사(25세)]. 그러나 이는 상황이 바뀌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화는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계급에게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는 없다.

현존 사회주의의 법률, 규범, 가치체계, 전통 등에서 계급의식의 변화가 지체되고 왜곡되어, 과거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고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단속에 걸리면 ‘뇌물을 고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면서 과거와 같은 복종, 충성, 동원으로 대표되는 위로부터 노동계급에게 강요된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돈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이윤은 돈주의 몫이지만, 노동만큼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사적 분야에 고용된 노동자들마저도 비공식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고용된 것이기에 공통된 이해관계와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단속과 처벌은 노동계급이 변화된 시

35) 탈북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회령지역의 경우에는 ‘머슴’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을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림 3> 북한노동계급의 정체성



대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노동계급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 노동계급으로서의 강요된 정체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권력의 의지일 뿐 현실이 아니다. 물론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정치경제적 조건이 미약하다. 또한 노동계급의 의식 역시 당과 국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왜곡에 의해서 그리고 강력한 법률과 처벌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이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팔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현존 사회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북한 노동계급의 정체성은 ‘복합적(hybrid)’인 성격을 띠고

있다(<그림 3> 참조).

5. 결론을 대신해서

주체사상에서 노동계급은 북한체제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급이다. 노동계급은 북한체제가 ‘사회주의’라는 점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경제관리의 주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는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이 이른바 ‘당성(Partheikeit)’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제시한 생산목표를 성취하는 것뿐이다. 지배권력은 충성심이 높은 노동자가 생산력도 높다고 현혹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검증될 수 없다.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이 명제는 노동계급의 동원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북한체제에서 노동의 형태는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계획을 매개로 하는 구체적(직접적) 사회화이다.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사회화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동계급이 현존 사회주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피동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에서 표출된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북한체제가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

데올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수령과 당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북한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지배권력은 이러한 체제정당성의 한계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은폐하고 스탈린주의적 언술체계를 통해서 합리화한다. 계획경제 체제는 일상적으로 노동을 동원하고 통제·관리하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제도가 된다. 배급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정치)의존도를 높였으며, 사회주의적 경쟁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채근하면서 동시에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수단들은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강력한 물리력은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물리력은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은 원자화되었다. 당연히 계급적 연대를 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정부는 여전히 현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과 국가는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동원과 착취의 대상이며 수령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다. 현재도 노동계급은 정치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물론 노동계급은 과거와 같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계획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배급제는 중단되었다. 북한체제가 노동계급의 생활세계를 식민화했던 다양한 수단들 가운데

일부를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되면서 북한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체제 내부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유효한 체제 정당화와 통합의 수단들이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하나는 억압적인 기제들이다.

현재 북한체제에서도 ‘사회주의’란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의 의식에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 변화된 노동자들의 삶의 양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급은 이러한 변화가 이 체제에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노동계급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비(임금)와 배급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 출근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다. 일부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가 노동계급의 자기검열과 사회의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지배권력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기제를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권력이 인민들의 삶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인민들을 정치사회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주체로 설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노동계급의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

이 유지될 수 없다면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과 체제 통합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이 일정정도 유지될 수 있다면 북한의 지배권력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세계에 대한 체제통합 방식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얼마 전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도 새로운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장화의 확산으로 북한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에게 여전히 강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지금의 북한 노동계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여부가 북한체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노동계급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현존 사회주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비록 북한체제에서 노동계급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급의 정체성 변화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계급이다. 독재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정당성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 접수: 3월 28일 / 수정: 5월 20일 / 채택: 6월 28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김천식, 『주체의 계급리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라이트, 에릭 올린(E. O. Wright), 『계급론』, 이한 옮김(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레닌, 블라디미르(Vladimir Lenin), 『무엇을 할 것인가?』, 김민호 옮김(서울: 백두, 1988).

리브만, 마르셀(Marcel Liebman), 『레닌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민규 옮김(서울: 풀무질, 2007).

마르쿠제, 헤르베르트(Herbert Marcuse),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문헌병 옮김(서울: 동녘, 2000).

마르크스, 칼(Karl Marx), 『자본 I-1, 2』, 강신준 옮김(서울: 도서출판 길, 2010).

모리스, 뉘(Dobb, Maurice)·폴 스위지(Paul Sweezy), 『자본주의 이행논쟁』, 김대환 편역(서울: 동녘, 1985).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4).

브레너, 로버트(Robert, Brenner), “전산업시대 유럽 농업 부문의 계급구조와 경제 발전,” 『신자본주의 이행논쟁』, 이영석 옮김(서울: 한겨레, 1985).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파주: 한울, 2010).

오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송주인 옮김(서울: 한빛, 1981).

윤철기,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서울: 양림, 2005).

이영훈,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의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달러라이

- 제이션·사금융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2호(2015).
-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서울: 까치, 1993).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
- 짜골로프, 니콜라이(N. A. Zagolow), 『정치경제학 교과서』, 윤소영 옮김(서울: 새 길, 1990).
- 톰슨, 에드워드 파머(E. P. Thompson),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니종일 외 옮김(과주: 창작과 비평사, 2004).
- 하버마스, 위르겐(Jürgen Habermas),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변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옮김(과주: 나남, 2009).

2) 논문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2009).
-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 _____,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4권 2호(2011).
- _____,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1호(2013).
- _____,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2015).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은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의 자생적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09).
- _____,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1호(2015).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 신문

김보근, “북한 부동산시장 꿈틀…“평양에 20만달러짜리 아파트 등장”, 『한겨레』, 2015년 4월 6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85702.html>).

3. 해외문헌

1) 단행본

Bahro, Rudolf, *Die Alternative* (Köl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77).

_____,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Manchester: New Left Review Press, 1978).

Beblawi, Hazem, “The Rentier State in the Arab World,”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5).

Bryson, Phillip, *The Reluctant Retreat* (Dartmouth, 1995).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San Diego: A Harvest/Hbj Book, 1995).

Elsenhans, Hartmut, *State, Class, and Development* (New Dheli: Dhaka, 1996).

_____, *Das Internationale System zwischen Zivilgesellschaft und Rente* (Münster: LIT Verlag, 2000).

Hofmann, Werner, *Stalinismus und Antikommunismus: Zur Soziologie des Ost-West-Konflikts* (Frankfurt: Suhrkamp, 1969).

Lane, David, *Soviet Labour and the Ethic of Communism* (Colorado: Westview Press, 1987).

Lenski, Gerhard, *Power and Privile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Lipset, Martin and Rokkan, Ste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Free Press, 1967).

Marx, Karl, *The Poverty of Philosophy*(Moskow: Progress Publishers. 1999).
Marx/Engels Internet Archive html ed([1955]1999).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7/poverty-philosophy/ch02e.htm>).

_____,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in *Marx Engels Werke 17* (Berlin: Dietz Verlag, 1962).

- _____,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in *Marx Engels Gesamtausgabe 25* (Berlin: Dietz Verlag, [1875]1985).
- Marx, Karl·Engels, Friedliche, “Manifest der Kommunitischen Partei.” in *Marx Engels Werke 4* (Berlin: Dietz Verlag, 1977).
- Nové, Alec, “The class nature of the Soviet Union Revisited,”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1986).
- Schmid, Claudia, *Das Konzept des Rentiers-Staates* (Hamburg: Lit Verlag, 1991).
- Schultze, Peter, “Übergangsgesellschaft und Außenpolitik,” in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3).
- Sweezy, Paul,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6).

2) 논문

- Engels, Friedrich, “Anti-Dühring,” in *Marx Engels Werke 20* (Berlin: Dietz Verlag, 1975).
- Elsenhans, Hartmut, “Rent, State and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to Self-sustained Capitalism,” *Paper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Par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s in Islamabad* (1994).
- Kornai, János,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vol. 39, Fasc. 1(1986).
- Kornai, Mskin, and Roland,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1. no. 4(2003).
- Kubat, Daniel, “Soviet theory of classes,” *Social Forces*, vol. 40, no. 1(1961).
- Marx, Karl, *Wage Labour and Capital*, in Marx/Engels Internet Archive([1847]1999),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Marx_Wage_Labour_and_Capital.pdf).
- Ticktin, Hillel,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Vol. 1, No. 1 (1973).

Change of Class-System and Working-Class' Ideological Identity after Marketization in North-Korea

Yoon, Cheol G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hange of class-system and working-class'Ideological Identity after marketization in North-Korea. The North-Korean society is still officially 'socialist society' and 'classless society'. But, there is the 'political class-system'based on the hierarchical power-structure in North-Korea. There are the new change trend occurring because of expansion of marketization and decline in North-Korea. The change takes place on the bottom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Firstly, the new merchant capital called 'Donju'has been formed. Secondly, some north-korean people are employed in the private sectors. Sure, North-Korea still claim to stand for 'socialism'. However, the North-Koreans experience crisis of the ideological identity as socialism. Nevertheless, the working-class in North-Korea does not

at least feel any identity as the capitalist working-class until now. And It seems that the working-class does not have an antagonistic class consciousness against the party and state. In other words, the mind-system of North-Korean working-class have the ‘hybrid’identity that is neither socialism nor capitalism.

Keywords: North-Korea’s marketization, working-class, class-system, mind-system, ideological identity